

## J프로젝트 안팎서 위협

새만금·태안기업도시 복합리조트 추진

마카오·홍콩 등도 경쟁...정부는 뒷짐만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국내·외에서 비슷한 유형의 복합 리조트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속속 주진돼 J프로젝트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을 연말까지 관련 부처로부터 J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후 내년에 실시계획을 수립, 2009년 착공키로 했으나 1일 현재 컨소시엄별 사업구상 통합작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관련 행정절차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만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포뮬러 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경주장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1일 착공됐을 뿐이다.

이처럼 J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동안 사업예정지인 해남·영암 일대와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전북 새만금지구에는 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새만금 레저파라다이스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유형으로 충남 태안군 태안을 일대에 건설되는 태안기업도시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오는 9월 착공예정이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전남도가 간척지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고예산에서 토지 매입비로 요청한 390억원 전액을 반영치 않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J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중요한 죽이었던 전경련은 과도한 토지개발비용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로 해 주동력이 크게 상실된 실정이다.

전경련은 당초 해남·영암 일대 1천 600만여 m<sup>2</sup>에 카지노 단지와 해양스포츠 단지 등을 포함해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부지에 대한 성도비와 호안축조비용 등 5천억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해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마카오·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변국가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복합리조트가 완성되거나 잇따라 대규모 사업이 계획돼 J프로젝트가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노리고 있다.

J프로젝트가 이같은 국내·외의 공세를 이겨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차별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지만 관련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J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시급하게 대안을 찾아야 할 간척지 확보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지난해 11월 노무

현 대통령의 J프로젝트 토지문제 적극 해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림부는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협의하겠다"는 기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전남도가 간척지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고예산에서 토지 매입비로 요청한 390억원 전액을 반영치 않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J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중요한 죽이었던 전경련은 과도한 토지개발비용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로 해 주동력이 크게 상실된 실정이다.

전경련은 당초 해남·영암 일대 1천 600만여 m<sup>2</sup>에 카지노 단지와 해양스포츠 단지 등을 포함해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부지에 대한 성도비와 호안축조비용 등 5천억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해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마카오·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변국가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복합리조트가 완성되거나 잇따라 대규모 사업이 계획돼 J프로젝트가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노리고 있다.

J프로젝트가 이같은 국내·외의 공세를 이겨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차별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지만 관련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J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시급하게 대안을 찾아야 할 간척지 확보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지난해 11월 노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두번째 한국인 인질 피살자인 심성민씨의 시신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경찰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심씨의 시신은 지난 달 31일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州) 안다르 지구 아리조 칼레이 마을의 도로변에서 발견됐다.

/AP=연합뉴스

탈레반 "오늘 오후 4시30분까지 협상 안되면

## 인질 또 살해하겠다"

심성민씨 두번째 희생...정부 "또 살해땐 좌시 못해"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인 탈레반이 지난달 31일 두 번째 한국인 인질을 살해한 데 이어 협상시한을 다시 제시하며 '추가 살해'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인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탈레반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아프간 정부는 물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아프간 추가 희생자 발생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인명까지 해치는 민행을 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다시 우리 국민의 인명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반드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납치단체의 요구인 '탈레반 좌수 석방'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성명은 탈레반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좌수 석방'의 결정권을 가진 아프간 정부와 미국 정부를 향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폴이된다.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은 이날 아프



두번째 희생자故 심성민씨.

부가 우리의 요구(탈레반 좌수 석방)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31일 1시)에 한국인 남자 인질 1명(후후 심성민씨로 확인)을 풀살했다"고 말했다.

심씨의 시신은 이날 아침 일찍 가즈니주 주도인 가즈니시티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안다르 지구

아리조 칼레이 마을의 도로변에서 지역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州) 관리인 암둘 라힘 데시월이 전했다.

탈레반 무장세력은 또 1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을 새로운 '최종시한'으로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인질들을 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랍 위성채널 알 자지라 방송이 지난달 30일 밤 10시(한국시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남녀 인질 12명의 모습을 방영했다. 그간 피랍 한국인의 육성은 몇 차례 공개됐지만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일자리가 독점 입수해 공개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질은 모두 여성 9명, 남성 3명으로 여성 인질은 모두 이슬람권에서 여성 쓰는 히잡(스카프)을 둘러썼다.

/백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美,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日 사과하고 책임져야"

미 하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계 3세인 미아를 훈다(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하고 하원 의원 435 명 가운데 168명이 서명,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통하여 미 의회가 일본 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는 없었으며, 표결 요청도 없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워싱턴=연합뉴스

## 큰 생각, 큰 행동, 큰 봄이 있는 기업

만장일치로 새만금 세계인공도시 조성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하원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제2차 세례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